

‘중국효과’의 정책 시사점

2011.1.4 |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 khyeo@saesayon.org

목 차

1. 중국효과와 디커플링 논쟁
2.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 변화
3. 내수주도 성장과 균형회복 전략
4. 중국효과의 정책 시사점



<http://saesayon.org>

요약

본문에서는 한국과 세계 경제 회복에 중국경제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경제성장률과 교역 확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중국경제가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낳은 반면, 실업자 증대, 사회복지 축소, 도농·지역·계층 간 불균등 발전, 국내 지출구조와 국제적 불균형의 문제점을 낳았다. 이를 기초로 중국경제의 향후 성장경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간략히 짚어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중국효과’와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몇 가지 정책함의를 다음과 같이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1997년 아시안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신용의 팽창과 수축에 따른 Boom-Bust 동학에 예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 재정정책의 효과성, 미래의 경제위기에 대비한 정책 공간(Buffer)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경기가 호전되는 시기에는 충분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버퍼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균형회복 전략은 성장전략의 변화와 관련되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는 내수-수출 균형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과제에도 함의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수출증가를 통한 경기회복은 가계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교훈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그 어떤 외부효과도 국내경제의 분배구조와 불균형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파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위와 관련된 것으로 중국은 과거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점차 변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등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금융경색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교역감소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구조적 내수와 복지 확대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효과와 디커플링 논의는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으로서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은, 남한은 탈미용중(脫美用中), 북은 탈중용미(脫中用美) 노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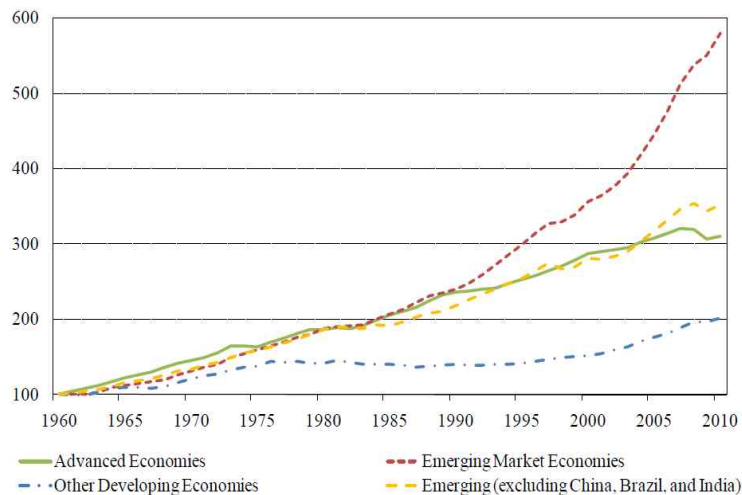
1. 중국효과와 디커플링 논쟁

흑인으로는 유일하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발전경제학자인 아서 루이스(Arthur Lewis)는 1979년, 수상 기념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질문을 던졌다.

“과거 수백 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의 성장률에 의존하였다. 선진국의 성장률이 높을 때 개발도상국의 성장률도 높았고, 선진국의 성장률이 낮을 때 개발도상국도 낮았다. 이러한 관계는 불가피한가?”¹⁾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으나, 대부분 선진국 중심의 질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후에는 그러한 결론은 거의 명제처럼 굳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과 10여 년이 채 되지 않은 2000년대에 새로운 국제적 흐름과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 논의와 2008년 금융위기는 새로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1] 세계 GDP에서 신흥국 비중의 변화(196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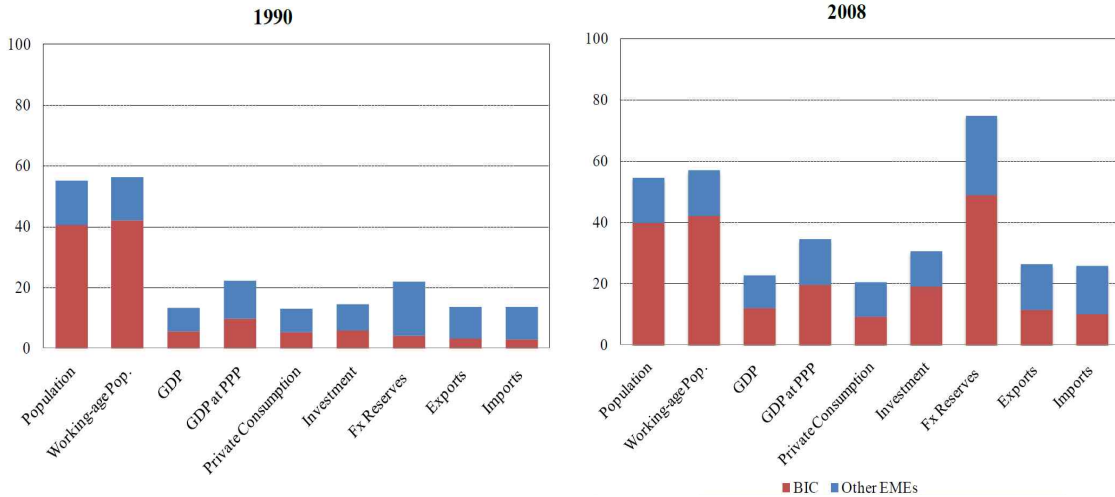
*인용: Kose&Prasad (2010), PPP 기준 1인당 GDP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신흥국경제는 1960년 이후 반세기만에 1인당 GDP가 6배 정도 증가하였다. 1960~80년대는 선진국경제의 성장률이 앞섰지만, 1990년대부터는 선진국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BIC(중국, 인도, 브라질)를 제외하면 그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즉 1990년대 이후 신흥국경제의 놀라운 성과는 BIC, 특히 중국과 인도의 괄목할만한 성장에서 비롯된다.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다른 거시경제지표들 또한 세계경제질서에서 신흥국경제가 차지하는 높은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2]에 따르면, 과거에 BIC 경제는 주로 인구와 노동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면, 이제는 다른 거시경제적 영역에

서도 그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²⁾ GDP, 민간소비, 무역 등 거의 모든 거시지표에서 불과 20년도 되지 않는 시기에,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배로 늘어났다. 특히 외환준비금은 1990년 20%에서 2008년 75%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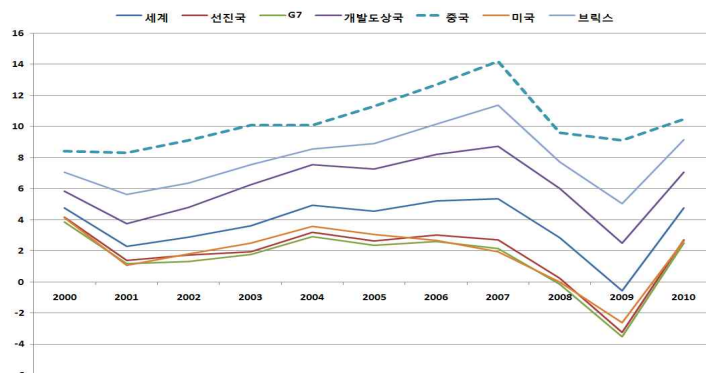
[그림2] 세계경제에서 신흥국의 비중 변화(1990-2008)



지난 수십 년 간 세계경제의 동학은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는 감기에 걸린다.”는 금융시장의 유행어에 잘 드러나 있다. 특히 1990년대 유행한 미국의 ‘신경제’ 성장과 월가의 금융 파워는 그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보편적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주류 담론에 근본적 의문이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2004년 이후,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브릭스로 대표되는 신흥국경제의 놀라운 성장률이 대표적 예다. 아래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경제의 성장률 격차는 2000년 1.7%p에서 2007년 6%p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6~7년 동안 세계경제의 경기변동이 수렴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흥국과 선진국의 경기변동이 다른 방향으로 벗어나고 있는지 이른바 ‘디커플링’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림3] 신흥국과 개도국의 연도별 성장률 추세



*자료: IMF WEO

당시 디커플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브릭스의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선진국이 초래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기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하였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세계경제가 동반침체에 빠짐에 따라, 신흥국의 자체 성장능력과 선진국 의존도 탈피를 주장하는 ‘디커플링’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특히 2008년 4사분기에서 2009년 1사분기 사이 신흥국 경제의 외환시장 및 수출수요 붕괴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의 강도는 선진국보다 더욱 심했다. 그리고 월가와 선진국 금융과위는 무역보다 금융시장의 연계가 경기 동조화 형성과 인식에 더 중요한 고리로 작용한다는 교훈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2009년 중반부터 새로운 논의의 틀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바로 미국의 더블딥 우려와 유럽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신흥국경제가 놀라운 성장 복원력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로 2009년 세계경제는 2차 대전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0.6%)을, 선진국경제는 -3.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2.5%), 특히 브릭스는 5%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국효과’가 자리하고 있다. 브라질과 러시아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9.1%)과 인도(5.7%)가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말로 세계경제질서가 변하고 있는지 중국의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 변화

1960~85년 동안, 선진 23개 국가가 평균적으로 세계경제의 3/4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9년에는 57%로 20%p 정도 감소하였다.

[표1] 세계경제의 GDP 비중 변화(1960~2009)

분류	1960-72	1973-85	1986-09	2008-09
선진국	80.30	73.21	65.71	56.98
신흥국	16.60	22.86	30.69	39.06
개발도상국	3.09	3.93	3.60	3.95
미국	32.64	27.08	25.88	23.58
일본	7.77	9.40	9.06	7.03
G-7	70.19	61.19	55.29	47.46
EU-15	34.41	31.10	25.74	21.77
BIC	6.3	9.04	15.09	22.57

*인용: Kose & Prasad(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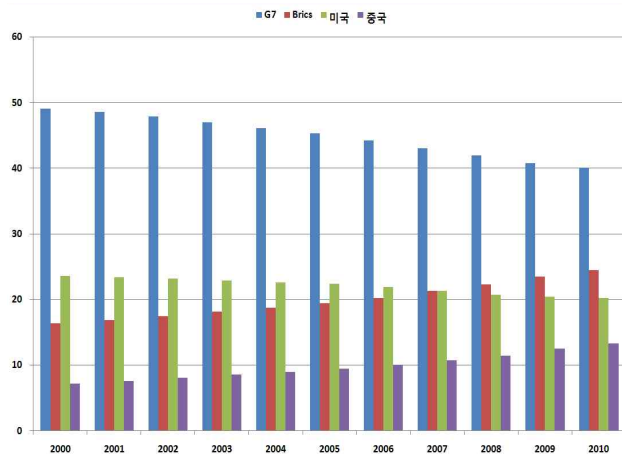
이와 대조적으로, 신흥국(24개)은 1960년대 17%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나 현재 거의 40%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개발도상국(59개)의 비중은 지난 50년 동안 1%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지형 변화는 주로 신흥국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경제는 1960년대 33%에서 금융위기 이후 24%까지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세계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EU-15개 국가는 34%에서 22%로 미국보다 그 위상이 더욱 추락하였다. 이에 반해 BIC 3개국은 1960년대 6%에서 현재 23%로 급성장하였다. BIC는 이미 EU를 추월하였고 미국경제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실제 세계경제의 지형 변화는 BIC, 특히 중국과 인도의 괄목할만한 성장세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GDP는 2000년에 전 세계 GDP의 3.7%에서 2010년에는 9.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같은 기간 31%에서 23.6%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GDP는 미국의 12%에서 현재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의 4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그림4]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PPP 환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같은 기간 중국의 비중은 7.1%에서 13.3%로 증가하였다. 미국경제의 65% 수준까지 증가한 것이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적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세계경제의 성장률에 중국경제가 기여하는 비율이다.

성장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흥국, 특히 중국경제가 미국경제가

*자료: IMF WEO, PPP 기준

쇠퇴하는 속에서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또는 여전히 세계의 최종 수요지로서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미국경제의 장기 쇠퇴를 가정한다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중국경제의 지위는 세계경제의 미래 또한 어둡지 않게 전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2]에서 보는 것처럼, 금융위기 이전(2000~8) 세계경제는 4~5%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평균 10.3%(2000~10)에 달하는 중국경제의 높은 성장률에서 비롯된다. 중국경제는 11차 5개년 계획(2006~10) 동안 연평균 11%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였다.

[표2] 금융위기 전후 중국경제의 성장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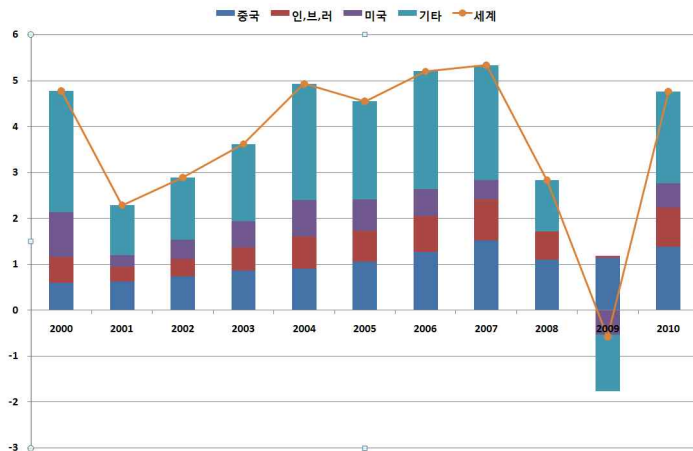
분류	2000	2001~4	2005~7	2008	2009	2010
세계	4.77	3.43	5.03	2.83	-0.57	4.77
중국	0.6(13)	0.78(23)	1.28(25)	1.10(39)	1.14	1.39(29)
브릭스	1.15(24)	1.26(37)	2.06(41)	1.72(61)	1.18	2.24(47)

미국	0.98(21)	0.51(15)	0.56(11)	0(0)	-0.54	0.53(11)
----	----------	----------	----------	------	-------	----------

* 자료: IMF WEO, ()는 성장기여율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분석하면, 미국경제는 20%에서 10%로 그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경제는 10%대에서 3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세계경제 성장의 1/3을 중국경제가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성장률 또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 9%에 달하는 성장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올해만 놓고 보면, 중국경제는 29%, 브릭스는 47%로 네 국가가 세계경제 성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추동하는 동력이 브릭스, 특히 중국에 있음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림5] 2000년대 세계경제의 성장률과 성장기여도



*자료: IMF W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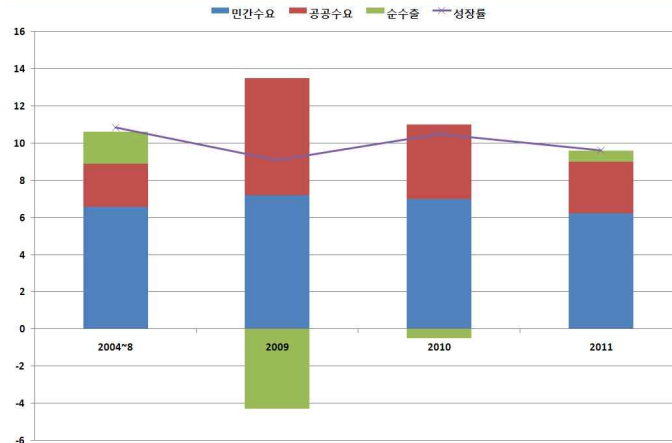
그러면 중국경제가 V자형으로 급격히 회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는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 전망과 전략의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정책 함의를 주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경제는 내수, 특히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공공투자의 증가로 빠른 회복세를 달릴 수 있었다.

금융위기 전 2004~8년 동안, 연평균 10.8%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그 중 민간수요와 공공수요, 그리고 순수출의 성장기여율이 각각 66%, 22%, 16%를 차지하였다. 2009년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특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따른 공공수요가 6.3%p의 성장기여도로 성장기여율은 70%에 달한다. 이에 반해, 순수출은 공공수요에 따른 수입증가로 -4.3%p의 성장기여도를 보였다.¹⁾ 2010년에는 10.5%의

1)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경상수지가 적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장기여도란 전년도 순수출에 대비한 올해의 순수출 변동분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순수출이 100이라고 해도 전년도 순수출이 200이면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가 된다.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공공수요가 4%p로 38%의 성장기여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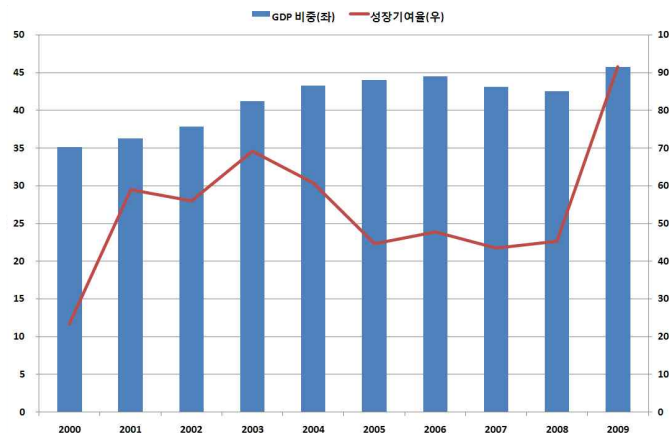
[그림6] 중국경제의 지출별 성장기여도



*자료: IMF(2009, 2010)

금융위기 이후 공공수요가 성장기여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것은, 2009년 11월 GDP의 13%에 달하는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수요와 더불어 주목할 것은 중국경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다. 2009년 기준, 총투자 규모는 일본의 두 배인 2조 달러로 전 세계 투자 총액의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5.8%로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아래 [그림7]은 2000년 이후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성장에 투자가 기여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투자 비중은 2000년에 GDP의 35%에서 2009년에는 45.8%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과거 30년 동안 평균 투자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2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는 8%p의 성장기여도로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무려 92%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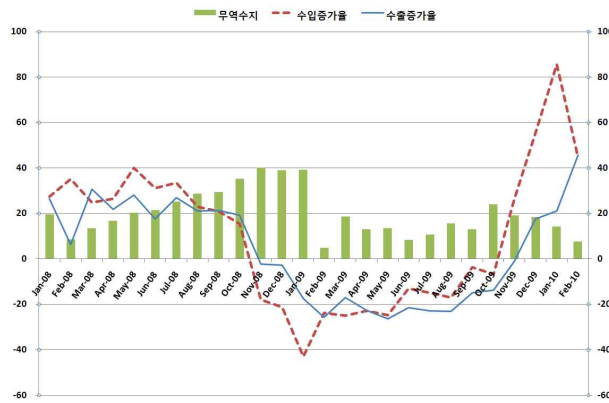
[그림7] GDP 대비 투자비중과 성장기여율



* 자료: ADB(2010)

한 마디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를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에 힘입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증가로 9%의 성장세를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자본재와 최종소비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한국의 빠른 수출회복을 촉진하였다. 또한 수입이 수출 증가율을 초래하여 무역수지의 흑자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적극적 내수확대 정책이 글로벌 불균형 문제도 점차 해소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7] 금융위기 전후 수입과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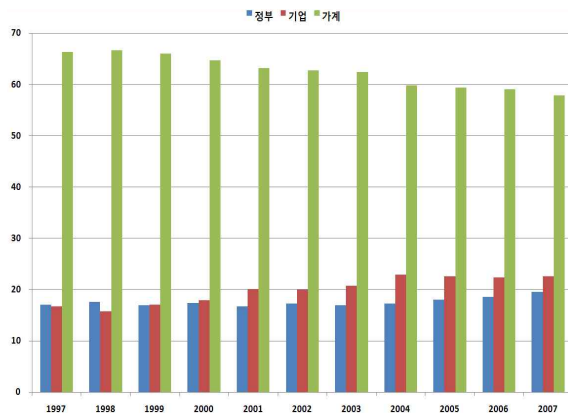


*자료: ADB(2010)

3. 내수주도 성장과 균형회복 전략

그러나 현재의 투자와 수출 주도 성장 모형은 많은 한계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경제는 1990년대 초반 한국경제를 괴롭혔던 수출 부문, 특히 조립 가공 중심의 제조업에서 과잉투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과잉투자에 따른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1980년대 50%대 초반을 유지하던 민간소비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는 34.5%까지 하락하였다.

[그림8] 경제주체별 소득분배의 변화



*자료: ADB(2009)

미국경제가 금융위기 직전 GDP의 70%까지 민간소비가 확대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지출 구조의 불균형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다. 중국경제의 높은 성장률은 가계경제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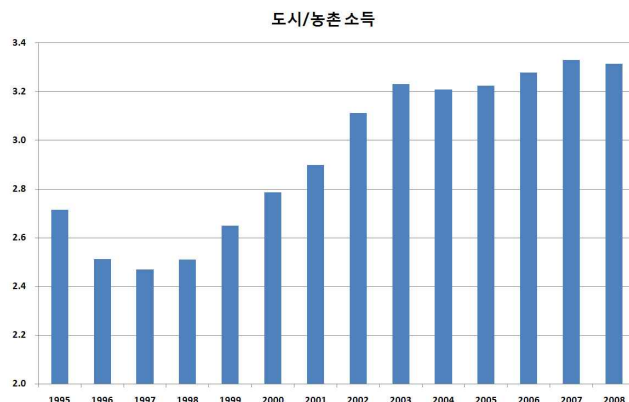
GDP에서 민간소비 비중이 하락하는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서, 이 변수를 다음과 같이 분해하여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다.

민간소비/GDP=(가계소득/GDP)×(민간소비/가계소득)

우선, 한국과 마찬가지로 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총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66%에서 2007년에는 58%로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17→20)와 기업(17→22)은 각각 3%, 5%p 증가하였다. 가계소득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국유기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결과 실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주도 성장정책으로 임금 증가를 가급적 억제하였고, 이에 따라 증가한 이윤은 대부분 수출부문에 투자증가로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소비와 소득의 비율은 흔히 소비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은 사회보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고, 다양한 형태의 소득불평등이 이를 또한 낮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계층은 저소득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낮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지역 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소비성향 하락의 주요 요인이다.

[그림9]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자료: ADB(2009)

의 동 배율은 같은 기간 6.5배에서 7.5배로 증가하였다.⁴⁾ 소비성향은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국 도시가구의 경우 상위 20%는 64.3%인데 비해, 하위 20%는 88.5%로 24.2%p 높다.

또한 사회보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의료, 노후 등에 대비한 예비적 형태의 가계저축률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2000-8년 기간, 도시와 농촌은 명목 기준으로 소득이 각각 12.4%, 9.7% 증가했는데 가계저축은 평균적으로 16.5%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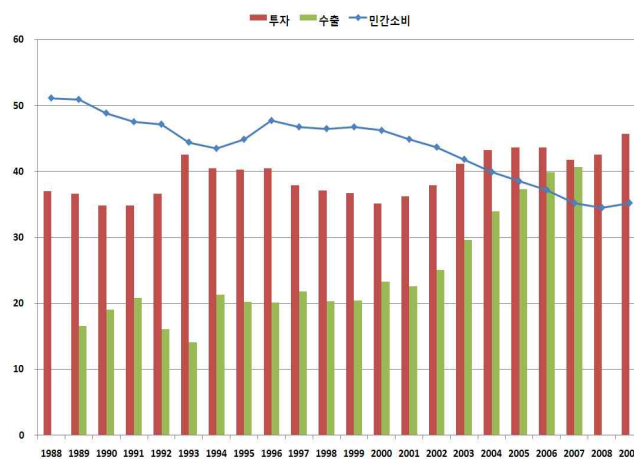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하락하는 이유는, 실업률 증가에 따른 가계소득 하락과 지역·계층 간 소득불평등 확대와 사회보장 부족으로 소비성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계소비 하락을 대체한 것이 투자와 수출이었다. [그림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계소비와 투자-수출의 비중은 정확히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의 소득 배율은 1996년 2.5배에서 2008년에는 3.3배로 확대되었다. 2008년 기준 농촌가구의 소비성향은 76.9%로 도시가구의 71.2%보다 5.7%p 높다. 또한 동일 지역에서도 계층 간 소득불평등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전체 도시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00년 3.6에서 2008년에는 5.7배로 확대되었다. 또한 농촌가구

다. 하지만 민간소비의 희생과 수출-투자 의존도의 증가는 과잉투자와 해외경제의 변화에 대한 중국경제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국 지도부의 이러한 인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수출 주도적 성장 체제는 국제적 불균형을 낳아,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 대한 요구처럼 중국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유발했다. 따라서 가계 소비 제고에 기초한 내수 주도적 경제성장 체제로의 전환은, 중국 내부의 사회적 갈등이란 문제와 국제적 불균형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림10] GDP 대비 투자, 수출, 소비 비중의 변화 추세



*자료: ADB(2010)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은 상이한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축통화의 특권과 금융부문 탈규제에 따른 과잉소비로 과국을 맞은 미국경제는 부채축소에 따라 소비와 수입 하락의 경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은 없지만, 당분간 수출 증가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과잉투자와 수출주도 성장체제의 중국은 사회불안과 국제적 불균형 해소 압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분배구조 개선과 내수주도 성장체제로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 균형발전 전략은 새로운 과제나 구호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증가가 사회적 안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04년 말 ‘조화사회(和諧社會) 건설’과 ‘균형발전’이란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토를 채택하였다.²⁾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08년 11월 총 4조 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내수부양정책을 실시하였다. 도시보다는 농촌, 특히 서부지역에 대한 사회 인프라 투자에 역점을 두

2) 조화사회 이론은 2004년 9월 중국 공산당 제16기 4중전회에서 처음 제출되어 제4세대(후진 타오-원자바오) 지도부의 통치이념이 되었다. 조화사회 이론은 소강(小康)사회의 2000년대 버전으로, 정책의 핵심은 균형발전전략과 갈등관리로 집약될 수 있다.

었고, 농촌의 소득 증가와 소비 진작 정책들에도 큰 비중이 주어졌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소득불평등 개선 등 제도적 개혁에 따른 가계의 최종소비 확대가 아니라 정부 주도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만성적인 과잉투자와 신용버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소매판매율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증가 등은 향후 내수주도 균형발전전략으로 안착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4. 중국효과의 정책 시사점

지금까지 한국과 세계 경제 회복에 중국경제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경제성장률과 교역 확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낳은 반면, 실업자 증대, 사회복지 축소, 도농·지역·계층 간 불균등 발전, 국내 지출구조와 국제적 불균형의 문제점을 양산하였다. 이를 기초로 중국경제의 향후 성장경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간략히 짚어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중국효과’와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몇 가지 정책함의를 다음과 같이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1997년 아시안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신용의 팽창과 수축에 따른 Boom-Bust 동학에 예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번 금융위기를 통해 중국의 자본시장 통제는 매우 효과적임을 다시 한 번 인지하게 되었다. 최근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들에서 자본통제 조치를 확대하게 된 것도, 두 번의 금융위기에서 중국의 효과적인 경험이 큰 교훈과 자극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지도부와 국민에게는 이번 금융위기는 서구식 신자유주의 개혁 방식의 권위를 떨어트려 중국식 발전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취약한 외환시장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한국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외환보유고 축적만으로는 자본 및 외환시장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도 깨닫게 되었다.³⁾ 국내적으로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 국제적으로는 역내 외환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재정정책의 효과성, 미래의 경제위기에 대비한 정책 공간(Buffer)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금융위기 대응을 신속한 통화정책과 GDP의 13%에 달하는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리고 금리인상과 재정긴축으로 대응한 1997년 IMF 처방이 심각한 정책오류였음도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특히 신자유주의 바람으로 과거에 등한시했던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성 완화와 사회경제적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임도 깨닫게 되었다.

3) 자본시장 변동성과 2008년 금융위기 대해서는 새사연 이슈브리핑(2010/11/10) ‘환율변동 완화의 근본대안은 자본통제’를 참조하라.

[표3] 금융위기 전후 GDP 대비 재정건전성 지표

분류	재정흑자			정부부채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중국	0.9	-0.1	2.0	20.2	17.7	20.2
미국	-2.8	-5.9	-12.5	61.9	70.4	84.8
한국	3.5	1.2	-2.8	29.6	29.1	34.9
일본	-2.5	-5.8	-10.5	187.7	196.6	218.6
동아시아	-0.7	-0.1	-3.4	35.1	36.8	41.8

*인용: Kose & Prasad(2010)

금융위기 이후 현재 유럽에서는 재정위기, 일본과 미국에서는 제로금리의 유동성함정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 신흥국들은 선진국보다 GDP 대비 더 많은 재정정책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의 문제로 홍역을 치르지도 않았고,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위의 [표3]에서 보는 것처럼, 위기 이전 양호한 재정건전성 지표가 큰 몫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경기가 호전되는 시기에는 충분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버퍼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중국경제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는 경제의 관리와 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켰다. 따라서 전략적 국유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강조가 지속될 것이고, 국유기업 개혁이나 금융부문 탈규제 흐름의 속도와 범위가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국유 기업이나 금융에 대한 정치적 지원 등 경제적 영역에서 자국 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셋째, 중국의 균형회복 전략은 성장전략의 변화와 관련되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수출 주도적 성장 체제는 국제적 불균형을 낳아,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 대한 요구처럼 중국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유발했다. 또한 과잉투자에 따른 GDP 대비 민간소비와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지출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낳고 있다. 이는 지역과 계층의 심각한 소득불평등에 따른 국내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양산하였다. 따라서 가계소비 제고에 기초한 내수 주도적 경제성장 체제로의 전환은, 내부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국제적 불균형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다목적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1990년대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개혁보다, 2000년대에 강조된 사회적 갈등관리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수-수출 균형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과제에도 함의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수출증가를 통한 경기회복은 가계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교훈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그 어떤 외부효과도 국내경제의 분배구조와 불균형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파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넷째, 위와 관련된 것으로 중국은 과거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점차 변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세계의 공장에 주목했던 대표적인 논의는 한때 유행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샌드위치론’이다. 이는 한미FTA를 추진하고자 했던 재정경제부 관료들의 외부충격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들은 한국의 제조업 기술 수준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고, 한국경제는 서비스업 개방을 통한 외부충격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경제의 역사에서 외부충격을 통해 정책이 의도한 생산성 성장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있다면 심각한 금융위기와 IMF 구제금융이었다. 각각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의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야심차게 금융자유화를 추진했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의 몰락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이 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가 급속한 경기회복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근원도 바로 제조업 중심의 튼튼한 산업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경제에 대한 시각은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시장과 성장엔진으로서 주목해야 한다. 즉 ‘생산’ 측면의 경쟁자로서보다는 미국을 대체할 막대한 ‘시장’으로서 ‘소비’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 측면은 노동집약적 가공업체로서 개성공단 중심의 남북협력,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로서 산업정책의 부활 등으로 정책 포커스를 옮겨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교역에서 과거 절대적인 선진국 의존형 경제에서 점차 신흥국 교역 확대 등 교역구조가 다각화 되는 긍정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등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향후 중국경제의 고성장 추세와 내수확대 정책, 역내 무역비중 확대 등이 지속되면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의 경기변동성에도 한국경제는 민감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상 대외경제의 충격은 금융경색과 교역감소를 통해서 전이된다고 했을 때, 두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분산은 충격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 **금융경색은 자본유출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교역감소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구조적 내수와 복지 확대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방향은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효과와 디커플링 논의는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으로서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와 정치, 외교와 군사 관계는 모두 미국 중심주의, 또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주어진 조건으로서 간주하여 구축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 등장의 핵심 구호중 하나인 ‘선진화’ 노선 또한 기존의 미국식 시스템을 한국이 지향해야 할 ‘표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는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서 중국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

지 않다. 이는 한국 보수의 뿌리 깊은 반복주의 노선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치와 외교는 미국에 철저히 의존한 채, 경제와 통상은 점차 중국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두 글로벌 리더의 긴장관계에 따라 국내외 정세에서 상시적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의 불일치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서 중국의 부상에 대비한 새로운 대중, 대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은, 남한은 탈미용중(脫美用中), 북은 탈중용미(脫中用美) 노선이다.** 두 강대국에 이리저리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두 강대국을 우리의 이익에 맞게 이용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뚫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을 한국 보수에게 맡겨 두었다가는 상시적 전쟁 위협과 경제적 불안이라는 점이다.

1) Lewis(1979), 노벨경제학상 수상 강연.

2) Kose & Prasad(2010), Resilience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to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 in Advanced Economies.

3) IMF(2009, 2010),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4) RIETI(2009), Income Distribution Policy, The Key to Expand Consumption.

5) ADB(2009, 2010), Asian Development Outlook.